

공장설립 제도와 규제개선

목 차

I

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

II

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III

공장설립 동향과 특징

IV

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I.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



1. 공설센터 개요

I.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

- 설치 근거 :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
- 설치 목적 :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, 공장관리업무의 온라인화, 표준화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설치 지역 :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 · 운영 ['97년 1월 개소]
- 전문 인력 : 30명(본사 7명, 지역 23명)
- 주요 업무 : 공장설립 대행(One-stop서비스), 콜센터 운영(1566-3636)
공장설립관리정보망(FEMIS) 운영, 기업이전지원센터 운영



2. 주요사업과 성과

1.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

공장설립 대행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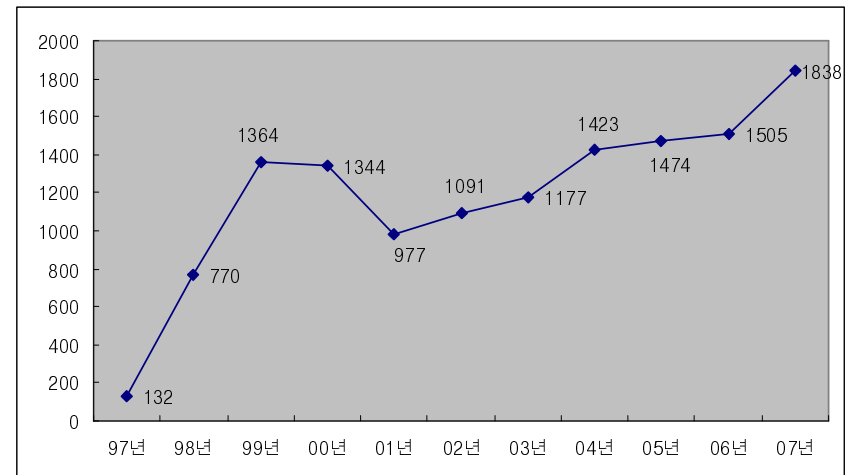
○ 입지상담, 현장조사, 인허가 무료 대행

□□ □ □ □ □ □□ □ □ □ □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○ 대상지역 : 전국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○ 대행실적 : 13,100건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□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

성 과

- 창업 및 공장설립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
-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비용 절감 : 260억원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- 전문 인력이 직접 대행하여 기간 단축 : 60일 → 11일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- 입지부터 공장가동까지 One-stop서비스로 기업 투자욕 및 편의 향상

1.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

QUESTION

- [illegible]

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

2. 주요사업과 성과(계속)

1.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

공장설립 상담, 정보 제공(On - Off line)

- **공장설립콜센터 운영 : 1566-3636**
- **홈페이지 운영 : www.femis.go.kr**

공장설립 제도 개선과 실무교육 강화

- [illegible]

II.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

II.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[illegible]

공장설립 유형(입지형태별, 신청대상별)



1. 공장설립 제도(계속)

II.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외국의 공장설립제도 비교(공장설립제도, 토지이용, 환경규제)

□ □	□ □	□ □	□ □	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	공장설립승인제 [산집법] * 건축면적 500㎡ 이상	공장등기허가제 [공장관리지원법] * 일부 제한적 적용	특정공장의 신고 [공장입지법] * 부지 9천㎡, 건축3천㎡ 이상	-
□ □ □ □	4개 용도지역 구분 공업지역, 관리지역 활용, 공장규모별 규제	도시지역, 비 도시지역 구분 * [도시]공업지역 [비 도시]정종건축용지	5개 용도지역 구분 도시, 농업, 산림, 자연공원, 자연보전(개별법 제한)	용도지역제 운용 *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설립(용이)
□ □ □ □	사전환경성검토, 배출 시설별, 업종별 규제	1만㎡ 이상 환경평가	100ha 이상 환경평가 개별 공장별 사후규제	엄격하게 규제 [연방정부, 주정부, 카운티에서 승인]
□ □ □	사전영향제도 및 공장규모, 업종별 제한	규모에 따른 제한없음 환경평가 제한적 실시	소규모 공장에 대한 입지, 환경 규제 완화	포괄적으로 적은 규제, 환경이외는 쉬운 공장 설립 [업종 규제 없음]

2. 공장설립 절차

II.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토지용도별 공장설립 가능 여부(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)

용도지역		지정목적	공장설립
도시지역	주거지역	거주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	△
	상업지역	상업 또는 업무편익증진을 위한 지역	△
	공업지역	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	○
	녹지지역	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	△
관리지역	보전관리지역	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곤란	△
	생산관리지역	농업.임업.어업생산 필요하나 농림지역 곤란	△
	계획관리지역	제한적 이용개발, 계획적체계적 관리 필요	○
농림지역		농업진흥지역, 보전산지	X
자연환경보전지역		보전이 필요한 지역	X

2. 공장설립 절차(계속)

II.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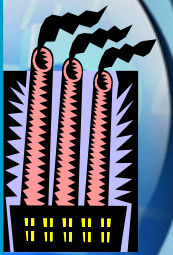
입지 유형별(계획입지 + 개별입지)

구 분	계 획 입 지	개 별 입 지
장 점	• 1995년 12월 15일 • 1996년 1월 15일 • 1996년 2월 15일 • 1996년 3월 15일	• 1995년 12월 15일 • 1996년 1월 15일 • 1996년 2월 15일 • 1996년 3월 15일
단 점	• 1995년 12월 15일 • 1996년 1월 15일 • 1996년 2월 15일 • 1996년 3월 15일	• 1995년 12월 15일 • 1996년 1월 15일 • 1996년 2월 15일 • 1996년 3월 15일

2. 공장설립 절차(계속)

II.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

진행절차(사전검토 → 입지선정 → 공장설립승인 → 공장건축 → 공장등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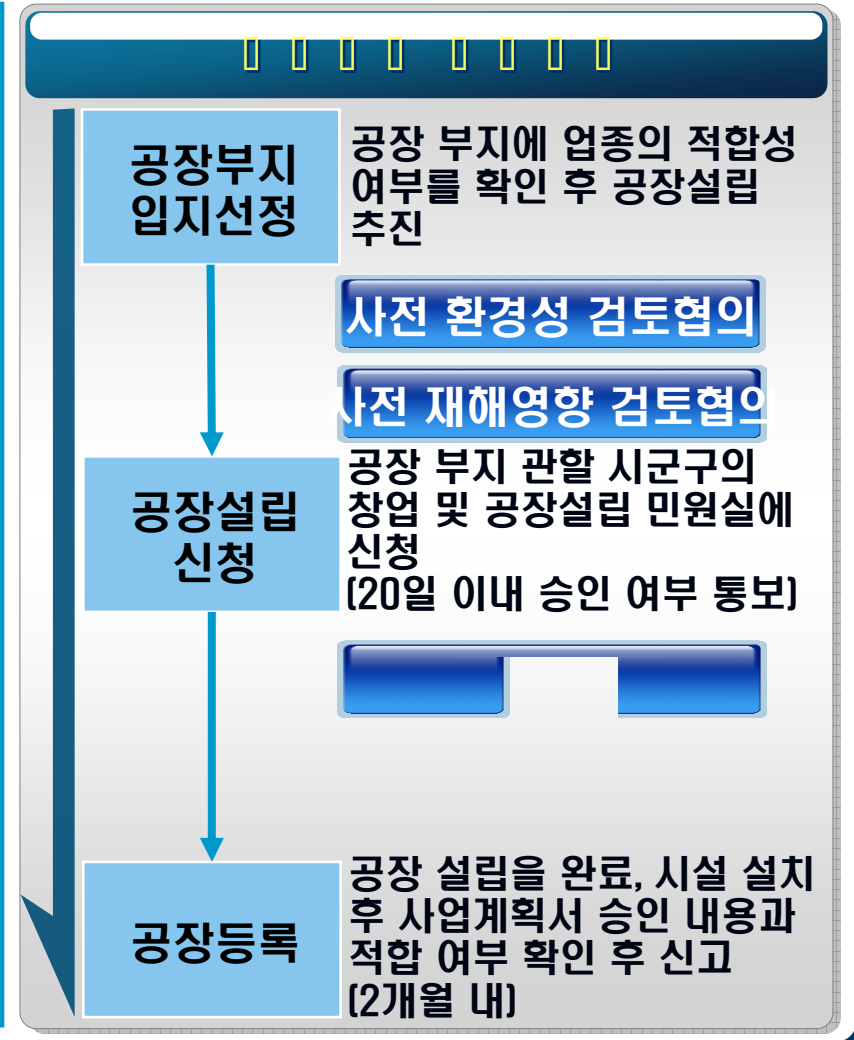


□ □ □ □ □ □

- 공장설립 희망자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장의 규모, 업종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필요
- 주요 검토사항 : 제조업 해당여부, 공장의 규모, 환경 배출시설 설치여부, 첨단산업 해당여부 등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-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지계약을 체결 (별도의 승인 절차 불필요)
- 개별입지는 부지의 특성, 자격,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따라서 승인 여부 결정
- 토지이용 관리체계는 용도를 사전에 정한 후 이에 따른 적합성(허용 여부)을 판단함



III.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



공장설립 동향[2001년 이후]

- IMF 이후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공장설립은 활발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- 최근 공장설립의 특징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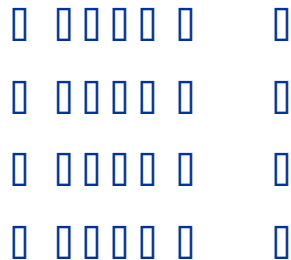
〈연도별 공장설립수〉

2. 공장설립 특징

III.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

공장설립 특징(2001년 이후)

○ 경기 변동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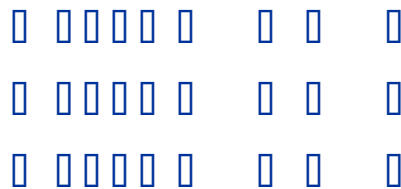


〈공장설립수〉



〈경제성장률〉

○ 규제의 정도와 완화에 일정 부문 영향



〈전국 공장설립수〉



〈관리지역 공장설립수〉

2. 공장설립 특징(계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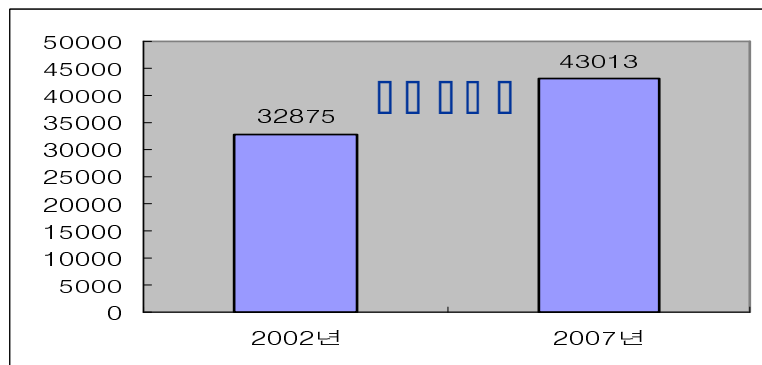
Ⅲ.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

공장설립 특징(2001년 이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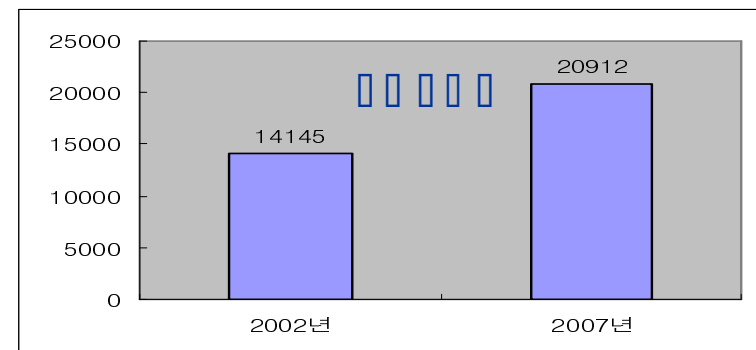
○ 소규모 공장 100만㎡ 이하의 공장설립 활발

구 모 별	1천㎡ 미만	1천㎡ 이상	5천㎡ 이상	1만㎡ 이상	계
업체수(개사)	82,295	35,278	4,078	3,047	124,698
비 율(%)	66.0	28.3	3.3	2.4	100

○ 산업구조 변화 영향 100만㎡ 이하의 공장설립 활발



< 첨 단 업 종 >



< 임 차 업 체 >

IV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

1. 공장설립 주요규제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국토의 계획 및
이용에 관한 법률

환경정책 기본법

2. 공장설립 애로 및 문제점

Ⅳ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- 토지 적성 평가(세분화) 및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이 지연 되어 원활한 용지 공급 차질
-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 지연으로 공장 설립 차질('08년말)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사전 환경서 검토 등의 행정 절차와 79개 공해업종에 대한 제한

공장설립 주요 애로사항과 문제점

- 관리 지역에서의 개발 제한 (난개발 방지)
 - 편법으로 난개발 초래 (3만m² 이하로 분산 설립)
- 기존공장 근처에 입지가 곤란하고 여유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분산하여 설립(난개발 초래)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- 소규모 공장 설립 시(관리지역, 1만 m² 미만) 기업에 어려움 가중
 - 사전 환경성 검토 요구(비용, 전문성)
-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로 비용 및 인허가 처리 기간 지연과 중복 규제
 - 국토계획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, 환경관련 개별 법령에서 규제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3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Ⅳ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개별공장의 입지공급 원활화

- 계획관리 지역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완화 (1만 m² 미만)
- 관리지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완화
-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기준 완화

환경·재해 관련 규제의 합리화

- 소규모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
- 수질오염총량제 개선
- 상수원 보호구역의 입지 제한 완화

상호 보완

-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
- 규정 정비 및 비효율적 행정 개선

인·허가 등 행정절차 개선

- 공장설립 민원해결을 위한 음부즈만 제도의 운영
- 공장설립 관련 지원서비스 강화

공장설립 지원체계 개선

계획관리 지역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완화 (1만 m2 미만)

현황 및 문제점

- 2003년 시행, 2005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공장설립완화 조치가 오히려 공장 설립 어려움 가중
 - 업종 제한 추가 지정, 사전 환경성 검토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추가

- 기업 인쇄 회로판을 제조하는 A사가 관리 지역에서 공장 설립 추진
- 동 규정에 의거 공장 설립 실패

-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
-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의 업종별 입지 제한 완화
 -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
 - 환경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면제('08년 1월 개선)
 - 토지 형질 변경 사업에 관련된 법규 내 모순 해소
 - 허가 기관에서 관리

관리지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완화

-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기업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접제한 완화
- 기존 집적지역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유도하여 허가
- 연접개발 제한 규모 확대 및 적용대상 사업 완화
 - 현행 3만m²을 10만m²로 확대
 - 사업목적이 동일, 연속성이 없는 경우 규제

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기준 완화



3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(계속)

IV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

현황 및 문제점

-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의 소규모 공장 (1만 m² 미만) 설립 허용하면서 사전 환경성검토 의무 부과(2005년 9월)
 - 개별법과 중복됨, 규모에 무관한 일괄규제 불합리
 - 사업자의 비전문성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비용 및 기간 증가됨

기업 애로사항

- D사(이전부터 1만 m² 미만 공장운영)의 경우 인접부지 공장증설 승인 신청하였으나 2005년 9월 이후 사전환경성검토로 공장설립 기간지연
 - 비용 : 15 ~ 30백만원
 - 기간 : 50일 지연

개선방안

- 소규모 공장에 대해 기업부담 완화
- 환경성 검토항목을 필요 최소항목으로 국한하되, 작성양식 표준화로 부담 경감
- 경미한 사항,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협의 배제

3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(계속)

IV.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

규정 정비 및 비효율적 행정 개선

현황 및 문제점

- 관리지역내 식품공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공장설립 애로(건교부 : 음식물, 산자부 : 15업종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)
-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포괄적 열거 (28~35 업종)
- 관련 공무원의 관행적인 환경성검토요구서 요구

기업 애로사항

- 죽염을 생산하는 I사는 24업종(화학)으로 분류되어 실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의 상이한 해석으로 공장설립 애로
- 기존 공장을 양수한 I사의 경우 지자체의 환경성검토요구로 비용과 시간 낭비

개선방안

-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 해석 필요
- 막연하게 열거된 조항을 정비하여 세분류까지 명시하거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유권해석 필요
-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의 행태개선 필요(규제개선 매뉴얼 작성, 일선 지자체의 마인드 개혁)

감사합니다